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

安清市* · 金根植**

〈목 차〉

- | | |
|---------------|-------------------|
| 1. 시민사회적 접근법 | 3. 북한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 |
| 2. 사회주의와 시민사회 | 4. 전망과 결론 |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이어서 전개되고 있는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흐름은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남북통일의 전망에 대해서도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근 반세기 동안 적대관계로 일관해왔던 구소련, 중국 등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의 7.4공동성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석화된 이후 실로 오랫동안 남북 양측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핵문제가 해결되는 기미와 함께 북한도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합의서 이행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실질적인 냉전해소나 통일의 전망이 당장 밝아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겠지만 북미회담의 합의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도 조만간 대화가 재개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조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반도의 두 체제가 더이상 소모적인 대결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촉발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한관계를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시권 내로 가져다 주었다. 분단의 외적 조건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의 통일문제는 내부의 조건과 역량에

*서울대 교수, 정치학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그 일차적인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차제에 북한의 리더십이 바뀌고 새 권력 집단이 기존 노선을 조금씩이나마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통일의 가능성을 일단 낙관적으로 전망케 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통일은 단순히 통일방안에 대한 문자적 합의나 남북당국자 사이의 정치적 흥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통일로 가는 실질적인 길은 우선 남북 양체제간에 相應性(compatibility)을 높이는 일이다. 남과 북의 체제와 정권이 서로를 인정하고 두 사회가 접근하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우리는 바람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과 북의 체제상응성 문제를 이른바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즉 이 글은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양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되, 우선은 남북한의 시민사회를 제각기 통일을 촉진하고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시민사회를 하나의 평면적 틀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이 글은 주로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형성가능하냐라는 문제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의 시민사회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변화하고 붕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시민사회적 요소에 비추어 북한의 경우를 대조, 분석하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1. 시민사회적 접근법

시민사회는 오래동안 정치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취급되어 왔다. 루소를 비롯한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일찍부터 귀족과 절대국가의 폭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민의 단결된 의지와 힘을 강조하였다. 시민사회론의 이론가로 자주 인용되는 또르빌은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에 기초한 결사조직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한다.⁽¹⁾ 서구에서 시민사회는 신분제로 예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결사체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주권의 소재지로 이해되었다. 계몽사상가들이 제기한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념은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와 절대왕정을 타파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가와 분리된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 서구의 민주주의는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시민사회는 주권자의 자유로운 집합체이자 다

(1)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2 Vols. (New York: Vintage Books, 1945).

양한 의사표출의 場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자의적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다. 서구사회가 나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건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처럼 국가와 구별되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획일적 통제를 시도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 불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시민사회의 위력 때문이다.

아시아를 비롯, 남미, 동구권, 및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주목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연구에서는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체제를 밀어내고 민주화로 이행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도 시민사회적 요건의 구비와 성숙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이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²⁾ 물론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추동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 경제발전에 힘입어 일어나는 사적 부문의 자율성 신장, 즉 시민사회의 발전은 민주화과정의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를 '제3의 민주화 물결'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로 표현한 헌팅턴(Huntington)은 여러 나라의 민주화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큰 몫을 담당하였음을 강조하였다.⁽³⁾ 이와 같은 관점은 한국, 대만 등의 민주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이들 나라에서 이루어진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은 역설적으로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장 및 그로부터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 결과 민주적 변화를 회구하는 세력이 단합하여 — 즉 시민사회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 결국은 국가로 하여금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도록 만든 것이다.⁽⁴⁾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민주화과정에서도 시민사회적 접근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회주의체제 변혁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시민사회적' 집단의 존재와 그들의 운동이 체제붕괴를 재촉하였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체제가 붕괴된 이후 정치경제적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집단들이 민주화에 긍정적인

(2) Guillermo O'Donnell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3) S. Huntington, *The Third Wave*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chap. 2 & 6 참조.

(4) Ahn, Chung-Si,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5, No. 4 (Winter 1991), pp. 740-754. 및 안청시,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민족통일의 길』(청농 강영훈박사 고회기념논문집, 법문사, 1992), 375-389 참조.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국가는 일당 체제이므로, 국가부문에 대하여 독자성을 가지는 시민사회나 시민조직의 발달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시민사회적 요소가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실제로 이들 세력이 체제개방의 틈을 넓히고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국가가 전 사회를 획일적으로 포섭하려는 지배계급의 의도와는 달리 사적 영역 또는 비공식적 부문이 존재하는 한 시민사회적 요소의 잠재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공업화로 말미암아 전문직종이 늘어나는 등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확대되었다. 특히 50년대와 60년대에 반소, 반공시위를 통해 비공식정치의 경험을 가질수 있었던 동구라파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용이하게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할 수 있는 내적 토양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적 토대 위에서 동구 각국의 시민운동단체는 —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인근 서방국가들의 시민운동과 연대하면서 — 국가의 감시와 지배를 벗어나 시민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고, 결국은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힘까지도 상당정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서 동독의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과 폴란드의 연대노조(Solidarity), 체코의 시민포럼(Civic Forum), 헝가리의 민주포럼(Democratic Forum), 그리고 소련의 인민전선(Popular Front)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기관과 독립적으로 조직된 단체였고 따라서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받지 못한 비합법단체였다.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국가로부터 독자적인 위상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국가와 대치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타협하면서, 일반 주민(시민)과 국가기제 사이에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한편, 공적 투입기능 또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적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⁵⁾

이상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적 접근방법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시민사회를 접근함에 있어서 — 흔히 동구의 시민사회를 논하는 이

(5) 시민사회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정의는 Larry Diamond의 개념규정과 상통하나 그의 정의가 '합법성과 공유된 규칙'을 강조함에 비하여 필자의 견해는 비합법성과 체제변혁적 활동까지도 시민사회적 행동양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Larry Diamond, "Rethinking Civil Society: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5, No. 3 (July 1994), p. 5 참조.

들처럼 — 체제 자체의 붕괴를 너무 안이하게 상정하는 입장을 피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등장을 곧 체제붕괴와 등식화하는 접근방식은 북한의 지배체제와 그 정치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시민사회를 논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체제전환 및 붕괴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먼저 남북 양측에 체제상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북한체제의 일방적인 붕괴를 상정하며 그 시민사회를 고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과 북의 체제가 자연스러운 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북한의 시민사회를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남북한간에 가능하고 바람직한 통일모형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현재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통일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에 의한 한국측의 흡수통일, 남북양측이 협상에 의해 통일에 이르는 모형, 그리고 장기공존형 점진통일 모형이 그것이다.⁽⁶⁾ 만약 흡수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의 시민사회는 북의 체제붕괴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민의 불만이 심화되는 경우 시민사회적 요소들은 변화의 요구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기능을 한다. 북한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만한 시민사회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루어 가야한다면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합의된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을 주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멘의 경우를 보건대 비록 합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하여 실현해 갈 수 있는 시민적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권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쉽게 그 합의를 깨고 다시 갈라서거나 전쟁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진적 통일모형은 남과 북 양체제가 장기간의 상호공존을 통해 서로가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체제상용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통일은 곧 양측의 시민사회가 수렴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로서 북한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길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남북한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적 접근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언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지든간에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며 완성시키는 주체는 남북한의 사회와 주민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의 부작용과 문제점, 합의에 의

(6)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서울: 동아일보사, 1993), 29-38쪽 참조. 이 연구에서는 앞의 모형 외에도 '북한에 의한 통일모형'을 추가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통일이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바람직스런 통일의 길은 장기공존형 점진통일의 모형이다. 이 경우 통일의 과제는 북한에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그 발전을 고무하는 일에서부터 접근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민사회가 형성 발전해 온 경로를 검토한 후,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북한 사회내에서 발견가능한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그 변화가능성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사회주의와 시민사회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불필요한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맑스는 부르조아 계급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시민사회는 결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비록 시민사회가 형식상으로는 동등한 시민들의 결사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르조아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계급 결사체'에 불과하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시민사회란 당연히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 종언이 예상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계급의 궁극적 타파를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에서 시민사회는 이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국가가 사회부문을 전일적으로 장악하는 통치기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칙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와 독립된 사회단체나 개별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시민적 요소'는 거부되었다. 이러한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 단일한 이데올로기, 국가소유의 계획경제 등의 기제를 구사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통치양식이라고 해서 시민사회적 요소가 전무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고르바초프 시대의 이론가였던 미그라니안(Migranian)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개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자발적인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사회주의에서도 시민사회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논지를 편 바 있다.⁽⁷⁾ 특히 1980년대에 들어 폴란드의 연대노조활동을 연구하면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시민사회적 접근법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체제에서도 공식 이데올로기나 당국가체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정치 및 사회 조직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 더구나 이러한 영역의 활동들이 공식 이데올로기나 규

(7) 미그라니안, "마르크스 정치이론에서 본 개인, 사회, 국가의 상호작용,"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서울: 풀빛, 1990), 197-218쪽 참고.

범체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은 사회주의적 시민사회에 대한 논쟁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⁸⁾ 더구나 1985년 이후 소련사회에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운이 팽배하면서 수많은 비공식그룹과 정치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자적' 사회조직들은 시민사회의 개념과 이론들을 사회주의 이론에 접목시켜 더욱 과감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사회주의에서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그람시의 개념이 원용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람시에 따르면 지배계급은 국가에 의한 강제와 시민사회를 통한 동의라는 이중적 정치과정을 통해 기존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는 시민사회를 지배계급이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동의의 획득을 통해 국가권력의 계급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헤게모니적 기제로 규정했다. 반면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피지배세력은 국가의 억압적 성격을 해체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이른바 '진지전'(war of position)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주의화를 위한 전략과 방책으로서 제시되었던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내부의 민주개혁 인사들에 의해 체제변혁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람시의 이론에 대입해 보면 — 그가 타도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 부르조아 사회란 곧 소련동구의 현실사회주의 국가로 대치된 셈이다. 그리고 부르조아 계급은 노멘클라투라가 되었으며,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란 다름아니라 맑스레닌주의로 각각 대상의 전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사회란 곧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당국가(party-state)의 지배와 통치영역 안에서 형성된 자유로운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구성되며, 공식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차율적인 개인과 집단이 주도하는 사회활동의 장'으로 그 의미가 규정될 수 있다.⁽⁹⁾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란 그 기능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정되는 시민사회의 개념과 상통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형성되는 '시민적 활동'의 조직행태와 활동목표, 국가와의 관계, 투입

(8) 이에 관해서는 A. Arato, "Civil Society Against the State: Poland 1980-1981," *Telos*, No. 47(Spring 1981), pp. 23-47; A. Pelczynski, "Solidarity and the Rebirth of 'Civil Society' in Poland, 1976-81," in J.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London: Verso, 1988) 등을 참고.

(9) Robert F. Miller,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An Introductio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s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North Sydney: Allen and Unwin, 1992), pp. 5-6.

기능과 정치적 자원동원의 양식 등의 측면에서 보면 통상적 의미의 시민사회와 사회주의적 시민활동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통상 '사적인 영역'으로 불릴 수 있는 조직, 즉 시민사회적 성격을 가진 부문에는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교회, 인권 및 환경운동 단체들이 중요한 몫을 담당해 왔다. 초기에는 일부 관제나 어용적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조직들이 후일 변화하여 시민사회적 성격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당이나 국가의 공식영역의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운동집단이며, 국가의 강제기구 및 직접통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정치사회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활동양식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대개 체제에 협력하면서 점진적 변화와 개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에 직접 반대하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공식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가치와 행동을 전파하는 커뮤니케이션 벨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권위체제가 흔들리거나 경제위기 등이 겹치게 되자 이들 사적 영역에 속하는 집단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고, 그 운동의 장도 정치부문으로 확장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체제와 직접 맞서 '반체제', '인권운동', '개혁·개방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초기 사회주의 시민사회론에 대한 이념적 기반은 주로 동구 각국의 지식인 집단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서는 하벨(Havel)의 '권력없는 자들의 권력'(power of powerless)과 미츠니크(Michnik)의 '新進化主義'(new evolutionism), 그리고 콘라드(George Konrad)의 '反政治論'(antipolitics) 등이 꼽힌다.⁽¹⁰⁾ 하벨은 체코의 77헌장을 주도했고 1989년에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하벨은 후기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포자기증, 무력증에 빠진 인민들에게 순종의 논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해방의 전략을 제시하면서, '권력없는 자들의 권력'을 부르짖고 나섰다.⁽¹¹⁾ 폴란드 작가인 미치니크의 '신진화주의론'은 당내 개혁에 의한 사회주의의 인간화가 무망하다는 신조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당과 국가의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권 밖에서 시민권 확장을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안한 투쟁이란 체제붕괴를 위한 전면전적 처방이 아니라 점진주의적, 비폭력주의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당과 국가를 개혁하기 위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ladimir Tismaneanu, *The Crisis of Marxist Ideology in Eastern Europe: The Poverty of Utopia*(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8), pp. 121-182를 참조.

(11) Vaclav Havel, et al., *The Power of Powerless*(New York: M. E. Sharpe, 1985)

해 시민사회 측에서 독자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개발하는 한편, 개혁에 필요한 압력을 창출하거나 행동 네트워크를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헝가리 지식인 콘라드는 ‘반정치론’을 통해 독자적인 시민포럼을 형성하여 정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조직화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포럼이 정치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정치론이 목표하는 바는 체제부정이라기보다 체제개혁적이다. 즉 국가가 사적 영역에 과도한 간섭을 자행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시민적 협동과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영역이 당의 통제 바깥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이상의 이론과 주장을 토대로 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민사회론이 더욱 확대, 발전하였다. 위글(Weigle)과 버터필드(Butterfield)는 소련, 동구지역의 시민사회 발전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⁴⁾ 첫째는 ‘방어단계’(defensive stage)로서, 이 단계에서는 개인과 집단들이 당과 국가의 통제에 대해 ‘시민적’ 자율성을 방어하려는 운동이 주축을 이룬다. 이때의 운동양식은 주로 개인의 내면적 자유나 도덕성, 종교자유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집중된다. 둘째 단계는 ‘형성단계’(emergent stage)이다. 이 단계에서는 당과 국가가 허용한 영역 내에서 半독자적인 사회집단과 운동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들은 주로 비정치적 이슈에 한정하여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당국가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이나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은 용인되지 않은 채 시민사회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동원단계’(mobilizational stage)에서는 사회집단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보다 근원적 이슈들을 정치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종종 이 단계에서는 사회집단과 국가간에 정면대결이 일어나거나 체제전환이 이루어진다. 네번째는 ‘제도화단계’(institutional stage)인데, 현재의 러시아와 동구가 처해 있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체제붕괴가 이루어진 후 새로운 정치질서가 수립되기까지 많은 진통과 혼란이 수반되기도 한다. 한편, 하라스치(Haraszti)는 이 단계를 (1)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후기스탈린주의’ 단계

(12) Adam Michnik, *Letters from Prison and Other Essays*(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13) George Konrad, *Antipolitics*(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4).

(14) Maria A. Weigle and Jim Butterfield,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The Logic of Emergence,"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1(Oct. 1992), pp. 1-19.

(post-stalinism), (2) 전면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후기전체주의’ 단계 (post-totalitarianism), (3) 그리고 체제붕괴 이후에 해당하는 ‘후기공산주의’ 단계(post-communism)로 구분하기도 한다.⁽¹⁵⁾

그러면 사회주의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하려면 어떤 요인 또는 선행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과연 북한에서도 시민사회적 집단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 또는 그 가능성과 전망이 어떠한가를 짐작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사회 안에 이러한 요인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체제 안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대체로 세 가지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이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산화되기 이전에 민주적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었거나 공산화 과정에서 반공, 반소투쟁의 경험이 있었던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후의 시민사회의 발전양상에 큰 차이가 난다. 동구제국은 자생적 혁명에 의해 사회주의화되었다기보다 소련의 군사적 점령에 의해 사회주의를 강요당한 측면이 강했다.⁽¹⁶⁾ 그런데 공산화되기 이전에 동구의 몇몇 사회들은 이미 의회민주정치의 경험을 통해 시민사회적 토대를 상당정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공산화 이후에도 반소, 반공운동이 보다 빈번하고 격렬하게 일어났다. 1956년에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일어난 반체제 저항운동과 1968년 프라하의 봄은 이들 나라의 정치전통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사건들이었다. 특히 폴란드에는 교회의 저항적 성향과 역할이 사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바, 그 영향으로 사회주의화된 이후에도 시민사회적 요소가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경험 때문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에서는 비교적 일찍 시민사회가 형성, 발전될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보다 일찍 개혁과 민주화에 착수할 수 있었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자

(15) Miklos Haraszti, "The Beginning of Civil Society: The Independent Peace Movement and the Danube Movement in Hungary," in Vladimir Tismaneanu, ed., *In Search of Civil Society: Independent Peace Movement in the Soviet Bloc*(New York: Routledge, 1990), pp. 85-87.

(16) 유고와 알바니아의 경우는 자생적 사회주의화의 요소도 강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스탈린식의 사회주의를 원했다기보다는 나찌로부터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유총선을 통해 착실하게 민주주의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의 전통이 부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취약한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과거의 집권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등 발전 전망이 보다 불투명하다.

아이젠슈타트(Eisenstadt)가 제기한 이른바 '왜곡된 근대성'(vicissitudes of modernity)의 문제는 사회주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문화론 및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¹⁷⁾ 사회주의체제가 정치슬로건으로 내건 해방, 자유, 민주주의 등의 근대성의 원칙과 민주적 선거제도 등은 사실은 현실과 괴리된 구두선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왜곡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대성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민들로 하여금 참여형 정치행태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습득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같이 왜곡된 근대성에 대한 저항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¹⁸⁾

시민사회 발전을 설명하는데 원용되는 두번째 이론은 이른바 '사회주의산업화론'이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산업화가 진행되면 사회분화와 다원화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이것이 곧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산업화는 도시화, 경제발전, 교육기회의 확대, 전문집단의 증가 등 근대적 부문의 확장을 동반한다. 그 결과 사회주의체제 내에서도 국가와 당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민사회적 요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타(Starr)와 레윈(Lewin)은 소련 시민사회의 발전을 산업화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스타는 소련에서 산업화로 초래된 도시화와 통신수단 발달에 주목하여 브레즈네프 통치기간에 소련에는 이미 상당 정도의 시민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¹⁹⁾ 라디오, 비디오, 녹음기, 전화, 팩시밀리 등의 통신기기 발달로 일반인들은 외부세계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더욱이 교육수준의 증가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정보에 대하여 비판하고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를 실시하자 자발적인 시민결사체가 폭발적으로

(17) S.N. Eisenstadt, "The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s and the Vicissitudes of Modernity," *Daedalus*, Vol. 21, No. 2(Spring 1992), pp. 28-39.

(18) 이 이론은 위의 역사적, 전통적 요인을 중시하는 입장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보완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19) S. Frederick Starr,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No. 70(Spring 1988), pp. 26-41.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레윈도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도시화, 산업화, 전문지식인층의 증가가 가져온 효과를 강조한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는데, 소련사회의 시민사회의 회복을 근대화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²⁰⁾ 1985년까지 소련의 도시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65%로 증가했다. 도시의 수도 급속히 늘어났으며, 전문교육을 받은 인텔리겐차의 수도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로 시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보다 증진된 권리와 독자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광범위한 소집단들이 국가와 당의 직접통제를 벗어나 비공식구조를 형성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결국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시민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는 세번쨰의 이론은 비공식부문의 확장과 그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주의는 국가에 의한 사회의 전면적인 통제를 이상과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과 단체의 모든 활동을 공식부문에 통합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주의 사회라 해서 국가나 당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데, 이처럼 공적 통제관계가 미치지 못하는 부문이 비공식부문으로 남게 된다. 바로 이러한 비공식부문이 발달하면 사회주의 내에서도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샘슨(Sampson)은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실상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의 공존 및 긴장관계에 의해 유지되어 왔음을 지적했다.⁽²¹⁾ 그는 비공식부문을 관료기구에서의 부패, 뇌물, 특혜 등과 경제부문에서의 지하경제권의 형성 그리고 통신부문에서의 지하유인물, 루머 등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공식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 개인생활 중시경향 등으로 분류했다. 이들 부문은 국가통제로부터 한발 벗어나서 사적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사적 영역을 보존,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서 비공식부문은 국가영역 밖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도 이바지한다. 샘슨은 비공식부문이 체제를 부패시키는 역기능과 체제를 위협하는 민주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하였다.

실라펜토흐(Shlapentokh)도 비슷한 논거에서 소련사회에서의 사적 영역의 확장 및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²²⁾ 그는 사적 영역은 개인과 가족, 친구,

(20) Moshe Lewin, *The Gorbachev Phenomenon: A Historical Perspectiv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국역) 모세 레윈 지음, 하용출 옮김, 『고르바초프 현상』(서울: 인간사랑, 1990).

(21) Steven Sampson, "The Informal Sector in Eastern Europe," *Telos*, No. 66(Winter 1985-1986), pp. 44-66.

(22) Vladimir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친척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결사체로 구성된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적 영역은 국가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스탈린시대 이후부터 소련사회에는 사적 영역이 비합법적 방식에 의해 점차 공적(국가) 영역을 침식해 들어갔음을 지적한다. 시민사회는 이 과정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했는데,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의해 잠식되어갈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민사회는 아직까지 서구적 시민사회론과 동일한 개념적 범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존재와는 애초부터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주의 내에서도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발달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이다. 시민사회적 전통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발달, 그리고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비공식 부문의 발달 등의 조건 여하에 따라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이제 이러한 조건변수들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면서 과연 북한에도 시민사회가 발전할 소지가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

3. 북한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

(1) 일반적 고찰

북한의 시민사회는 그 존재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는 시민사회적 요소가 매우 미약하며 단시간에 시민사회적 요소들이 출현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튼(Cotton)은 동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민사회가 북한에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미숙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는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될 김일성 이후의 체제개혁이 시민사회의 토대마련에 기여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²³⁾ 민족통일연구원이 낸 보고서에서는 북한사회를 소련, 동구의 시민사회 발달과는 매우 대조적인 臣民社會로 규정짓고 있다.⁽²⁴⁾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23) James Cotton, "Civil Society in the Political Transition of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6, No. 2(Summer 1992), pp. 319-337.

(24)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체제 개혁, 개방사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634쪽; 박종철의 연구도 북한의 시민사회는 아직 개인의 내면적 자

신민사회란 시민사회가 발달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개인에게는 사적 영역이 허용되지 않고 체제와의 관계에서 단지 종속적인 신민(subject)으로 남아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입기능과 체제에 대한 조직적 저항세력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비록 밑으로부터 불만이 잠재해(latent)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화하여 조직적 세력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를 그것이 미약한가,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 역시 같은 맥락이다.⁽²⁵⁾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북한사회에는 아직 개인의 내면적 자유를 사회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시민'의 개념이 부재하다. 개인은 다만 가족과 사생활의 자유를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의 사적 영역을 지킬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는 당과 공권력 이외에 국가와 인민의 관계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자율적 '사회'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을 앞에 지적한 세 가지 요소와 대비하여 살펴보자. 첫째, 역사문화적 경험에 있어서 북한사회는 시민사회의 형성에 유난히도 부적합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조 봉건사회는 미처 시민적 의식이 발생하기도 전에 일제의 침략과 36년간의 강점기간을 맞았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소련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국가를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여건하에서 시민사회에 합당한 정치문화적 토대가 마련될 수 없었다. 북한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한국전쟁과 남북간의 긴장과 대치때문에 시민적 요소의 발전이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에는 동구에서 보는 것처럼 시민적 자유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반체제운동이 일어난 경험도 없다. 더욱이 — 남북한사회 모두에게 공통적인 유산으로 작용한 — 동아시아의 유교문화는 인민의 저항권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강했고 개인주의적 관념의 발달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²⁶⁾

둘째, 사회주의산업화론의 측면에서 본 북한사회의 시민적 요소는 어떠한가? 공업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분화는 북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1958년에 일단 매듭진 것으로 선언된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유를 수동적으로 지키려는 방어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박종철, "북한의 국가·사회와 정치적 변화," 『북한연구』, 93년 가을호, 189쪽.

(25) Marilyn Rueschemeyer, Dietrich Rueschemeyer & Sang-In Jun,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fter Authoritarian Rule: Implications of The East German Experience for North Korea," 한국정치학회,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1993. 7.21-22) 발표논문, 8쪽.

(26) James Cotton, *op. cit.*, pp. 322-323.

북한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 대대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화, 산업화, 전문지식인의 증가 등의 현상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93년 현재 북한의 국내총생산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27.9%,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이 32.9%, 사회간접부문 및 서비스 부문은 39.2%를 차지하여 2차산업 중심의 근대적 산업구조를 갖추어가고 있다(표 1 참조).⁽²⁷⁾ 산업화에 따른 계층분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농민인구는 1946년에 74.1%였으나, 1987년에는 25.3%로 감소하였다. 반면 노동자수는 동 기간 중 12.5%에서 57.0%로 증가하였고 전문직, 사무원 등 이른바 신중간계급은 6.2%에서 16.8%로 증가하였다(표 2 참조).⁽²⁸⁾ 도시화도 상당 정도 진행되어 1953년의 도시인구는 17.7%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총인구의 59.6%가 도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²⁹⁾ 교육수준의 증대에 따른 전문지식인의 증가도 괄목할 만하다. 1972년부터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1992년 현재 북한에는 대학수가 280개, 대학생은 31만 4천명에 이르렀다(표 4 참조).⁽³⁰⁾ 또한 성인 중 고등교육을 받은

〈표 1〉 북한의 산업구조

(단위: %, 경상 GDP = 100)

	1991	1992	1993
농림어업	28.0	28.5	27.9
광공업	38.0	33.8	32.9
광업	7.9	9.2	8.2
제조업	30.0	24.6	24.7
(경공업)	(8.0)	(6.3)	(6.8)
(중공업)	(22.0)	(18.3)	(17.9)
전기가스수도	5.0	5.1	4.8
건설	8.2	9.1	8.5
서비스	20.9	23.5	25.9
(정부)	(13.0)	(15.0)	(16.8)
(기타)	(7.9)	(8.6)	(9.0)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6쪽.

(27)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4, 6쪽.

(28)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 83;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613쪽 참고.

(29)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op. cit.*, p. 21.

(30)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서울: 공보처, 1993), 130쪽.

〈표 2〉 북한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

(단위: %)

	1946	1963	1986	1987
노동자	12.5	40.1	56.3	57.0
공무원 및 사무원	6.2	15.1	17.0	16.8
협동기업노동자		1.9	0.9	0.9
농민	74.1	42.8	25.9	25.3

*출처: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 83.;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613쪽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표 3〉 북한의 도시인구 비율

(단위: %)

	1953	1960	1965	1970	1975	1980	1987
도시인구율	17.7	40.6	47.5	54.2	56.7	56.9	59.6

*출처: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op. cit.*, p. 21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표 4〉 북한의 대학교 및 대학생 수

(단위: 개교, 천명)

	1965	1975	1985	1992
학교수	98	150	234	280
학생수	156	—	280	314

*출처: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서울: 공보처, 1993), 130쪽에서 작성한 것임.

사람 및 대학생비율도 13.7%에 달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꽤 높은 교육수준에 도달하였다(표 5 참조).⁽³¹⁾

이처럼 사회주의 산업화의 결과들은 대체로 북한사회가 농업사회에서 근대 공업사회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 사무원 중심의 계층분화현상도 여타 사회주의국가에 견줄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다. 인텔리층의 증가 등을 보아도 북한이 초기적 다문화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잠재적 토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바야흐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나름의 구조를

(31)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op. cit.*, p. 77.

〈표 5〉 북한과 각국의 교육수준

(단위: %)

국별	연 도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및 대학생비율
북한	1987/1988(16세이상)	13.7
남한	1980(15세이상)	9.2
일본	1980(15세이상)	18.5
중국	1982(15세이상)	0.9
홍콩	1981(15세이상)	6.6
미국	1987(16세이상)	36.0
동독	1981(15세이상)	14.9
소련	1979(16세이상)	9.4

*출처: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op. cit.*, p. 77에서 작성.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산업화가 거의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전적으로 계획경제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산업화와 구조분화의 결과가 곧장 자율적인 시민공간의 확대로 이어지기를 쉽게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텔리의 증가와 신중간계급의 증대현상도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도구적 방편에 불과하다. 북한이 강조하는 전인민의 인텔리화는 동시에 그들을 혁명적 노동계급화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³²⁾ 이 때문에 인텔리의 수적 증가나 전문직 종사자의 증대가 곧바로 자율적 시민세력의 등장을 예고하거나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사회론을 사회주의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³³⁾

(32) 북한에서 신중간계급의 범주를 일명 '근로인텔리'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33) 사회주의산업화론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산업화의 결과는 사회구조의 다원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는 곧 정치적 변화 즉 민주화로 이어진다는 '자연발생론'은 경제결정론에 의한 단순화의 우려를 안고 있는 논리에 불과하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시민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하나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충분조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사회변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하기 어렵다. 고희욱,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고희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160쪽 참조.

마지막으로 비공식부문의 발달이라는 변수를 살펴보자. 국가의 통제와 장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공식부문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귀순자나 외국 방문객의 증언을 통해 간간히 언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비공식,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각종 부패 행태나 비공식적인 지하경제를 통해 인민들이 필수품을 조달하는 사례가 북한이라고 해서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특히 생산성의 정체와 성장의 둔화로 인해 80년대 이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행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재화의 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물교환과 암거래 등의 통로를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인민의 거의 모든 생활이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고도로 조직화된 북한에서 이처럼 비공식부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 바깥에 어느정도 사적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편 북한의 비공식부문은 아직까지 조직화 단계에 있지도 않으며, 국가의 통제 메커니즘이 이완되는 조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 또는 붕괴 전에 보이기 시작하는 체제 위기의 징후 또는 권위의 누수현상도 아직 북한사회에서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과 국가는 여전히 전체사회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시기에 나타나는 비공식부문의 등장도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물자조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체제저항적이거나 체제위협적인 비공식부문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좌는 미약하며, 더구나 이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한에는 아직도 시민사회적 요소가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기초가 미약하고, 그 조직화 및 정치세력화의 여건이 거의 부재한 편이다. 비록 비공식부문이 서서히 등장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세력이 매우 미미하여 이들이 체제변화를 추동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요원하다. 북한사회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2) 북한사회의 특수성: 정치사상적 지배

아이젠슈타트가 제시한 사회주의 국가의 '왜곡된 근대성' 개념도 북한의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선전하고 근대적인 정치제도를 형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독특한 이데올로기 담화구조에 의해 집단주의적 사

고와 국가중심의 원칙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시민사회론에 입각하여 북한사회를 접근하려 할 때 우리가 부닥치는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북한이 사회주의 중에서도 독특한 유형의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면 다른 이웃들과 보편적 원칙을 공유하는 듯 하나 실은 이른바 '주체형 사회주의' 라는 특수한 방식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체제의 이 독특한 측면을 고려해 가면서 그 시민사회의 형성가능성 및 장래를 내다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전망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북한의 특수성은 그 사회가 고도로 정교화된 정치사상적 지배에 의해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가에 의한 사회의 통제와 장악이 단순히 국가기관의 폭력기제나 이에 입각한 조직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에 대한 사상적 정당성을 통해서도 비교적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원리는 북한 사회내부에 공식영역에 대치되는 사적 활동의 등장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우선주의를 채택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인민의 정치적, 사상적 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왜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그토록 강조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³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모든 인민들이 단일한 공식 이데올로기만을 받아들이고 이에 입각해서 모든 정책과 방침은 물론 일상생활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일사상체계는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의 북한사회는 유일사상이 거의 완벽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일사상체계의 내용은 1974년 김정일이 주도한 '유일사상 10대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³⁵⁾

(34)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노동신문』, 1968년 5월 20일자.

(35) 유일사상 10대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서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4.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김일성동지가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김일성동지의 크나 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유일사상체계를 소위 주체사상의 내용 속에서 더욱 정교화하고 발전시킨 것이 그들의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강조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고 혁명투쟁의 최고영도자'로 규정된다.⁽³⁶⁾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맞닿아 있다. 1986년부터 김정일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인간이 가진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구분하고 북한사회는 사회정치적 생명에 의해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수령은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한 정치적 생명의 제공자이고 당은 그 생명의 모태이다. 따라서 수령-당-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맺어진 혈연적 관계이고 하나로 통일된 혁명과 건설의 주체를 구성한다고 한다.⁽³⁷⁾

요컨대, 북한사회에서는 유일사상체계,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시민과 정치, 개인과 지도자, 사회와 국가가 가부장제와 흡사한 유기적 통일체로 묶여져 있다. 따라서 국가와 별도로 존재하며 수령과 당의 지도를 벗어나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은 원천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부세계에 알려져 있는 북한사회는 이러한 사상적 지배에 의해서 놀라울 정도로 통합되어 있다. 유기적 생명체론, 가족국가론, 그리고 영도 예술의 개념을 토대로 구축된 북한사회를 '유격대국가'로 규정한 와다하루끼(和田春樹)⁽³⁸⁾나 확대된 가족개념에 바탕해서 위계적 질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사회를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로 규정한 커밍스(Cummings)⁽³⁹⁾ 등은 이처럼 국가가 사회를 놀랄만큼 획일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북한사회의 각 부분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다. 9.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지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김일성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 북한연구소, 『북한총람』(서울: 북한연구소, 1983), 171-179쪽.

(36)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서울: 백산서당, 1989), 179-198쪽.

(37)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59-165쪽.

(38) 와다하루끼(和田春樹), "유격대국가 북한의 성립과 전개," 『극동문제』, 1993년 12월호.

(39) Bruce Cummings,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1982/1983), pp. 269-294.

를 잠깐 살펴보자. 통상 잠재적인 시민사회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직과 단체들이 모두 북한에서는 국가와 당의 일방적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공식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당의 '외곽단체'로 기능한다. 북한에서 이들 조직을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라고 지칭하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이외의 정당으로 '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의 존재를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당은 서구의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야당으로 불릴 수 없는 조직이다. 이들 정당은 노동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이들 정당을 노동당의 '友黨'이라 부르기도 한다.⁽⁴⁰⁾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는 사회민주당이 전체의원수의 7.4%, 그리고 천도교 청우당이 3.2%를 점하고 있으며 절대다수는 여전히 노동당원이 장악하고 있다.⁽⁴¹⁾ 노동당과 이들 우당과의 협력관계는 이른바 '다당합작제도'로 불린다. 공식문서에 따르면 북한의 3당은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인해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친근한 우정을 간직하고 공동의 목적인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우당관계'에 있다. 이처럼 경쟁, 갈등이 아닌 단결, 협력, 연대에 기초한 북한의 다당합작제도는 '조선노동당의 영도아래 애국적 정당들이 우당관계를 맺고 연합전선에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장기적이고 공고한 정당제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⁴²⁾

북한의 이른바 '사회단체'들도 당과 국가의 전권적 지배하에 놓여 있기는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사회단체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등 4개의 근로단체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소년단' 등의 사회조직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조직의 임무는 한결같이 특정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나 정치경제적 요구를 대변하는 일과는 무관하다. 다만 노동당의 지도하에 당정책을 선전, 교양하고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육성하는 일을 맡고 있을 뿐이다. 이들 단체의 주요 임무는 대중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유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다. 북한에서 근로단체의 역할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노선, 정책

(40) 이들 우당들의 임무는 정당 본연의 임무인 국민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일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이들 정당들은 해방직후 나름대로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가지고 탄생되었으나, 북한 사회주의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그 성격이 변화되어 지금은 단지 노동당의 방침대로 대중을 이끌어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41)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서울: 통일원, 1991), 174쪽.

(42) 최광호, "우리나라 다당합작제도와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사회민주당』, 1994년 제2호, 7-8쪽.

을 대중에게 교양시키며, 그 중에서 핵심을 키워내어 당대열에 보충해 주는 노동당의 '방조자', '후비대'로서 규정된다.⁽⁴³⁾

언론과 종교에서는 시민사회적 요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가? 소련, 동구에서는 언론과 종교가 시민적 영역을 선도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언론과 종교의 역할도 국가의 획일적 통제 아래서 당의 지도와 방침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제한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선전하고 옹호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⁴⁴⁾ 북한의 언론은 이른바 '주체의 출판보도물'과 '김일성주의 혁명적 출판보도물'을 언론사업 지침서로 삼아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언론은 이른바 '선전선동자적 기능', '조직자적 기능',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북한의 언론이 그 사회내부의 비리, 범죄, 사회문제 등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신문처럼 남한의 반정부시위들을 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의 간부급에게는 '참고신문'이 회람되어 국제정세 등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일반대중은 국내외의 사실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다. 다만 각급 조직생활을 통해 하달되는 해설과 교양자료에서 정보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종교 역시 북한에서는 개인간의 사적 연결망이나 집단행동의 토대로 이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를 아편으로 간주하는 공산주의적 종교관과 모든 사회단체와 조직은 당과 국가를 통해야 한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종교단체 활동은 그 범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약하나마 종교의 성장이 감지되고 있다. 1992년에 새로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는 종교관련 용어의 해석이 비교적 현실화된 바 있고, 80년대 이후에는 통일과 관련된 종교단체의 활동이 전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등 4개의 종교단체가 존속하며 실제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장충성당이 운영되고 있다.⁽⁴⁵⁾ 그러나 최근 종교활동이 가시화된 부분은 주로 남한과 해외동포와의 통일선전사업에 관련된 활동에 치우쳐 있다.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의 종교활동은 아직 허용 단계에 있지 않으며, 종교활동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와 감시속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43) 사회과학출판사, 『영도체계』(서울: 지평, 1989), 174-179쪽.

(44)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356쪽.

(45) 통일원, 위의 책, 377-381쪽.

이상의 분석에서 예시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는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적 지배란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주의적 시민사회가 조직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둘째, 북한사회는 사적 영역의 정치운동이 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제 조직들 — 정당과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종교단체 등 — 의 발달도 미미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안에 북한에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내적인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봉쇄되어 있는 셈이다. 다만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불만이 대중항의 등의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은 제외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조직과 자율기반이 취약하다. 셋째, 만약 통치기제의 기능이 이완되는 경우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대규모 민중적 항거나 반체제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견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통제불가능한 사태로 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할 때 평화적 통일에 접근하는 길은 우선 북한 안에서 서서히 국가와 민중간의 시민적 완충지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에 새로운 권력자가 들어서고 부분적 개방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이 때 우리에게서 북한 안에 '사회'를 새로 건설하는 일에 한국이 무엇을 보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4. 전망과 결론

김일성의 사망과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은 조만간에 북한사회에도 변화가 올 것임을 예고한다. 그러나 김일성 이후에 대비해 이미 오랫동안 후계체제가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상기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 권력체제의 변화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면서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가 무너지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정일은 변화된 정세속에서도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이며, 집단주의와 사회주의의 원리, 그리고 노동당의 유일지도체제를 굽히지 않고 유지해 나갈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북한사회는 다른 어느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외부적 영향이나 압력에 의한 변화가 초래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우리는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조만간에 내생적으로 형성될 가능성 역시 별로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김정일 체제가 스스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형성 토대를 마련해 주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정치적 다원주의가 북한에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체제 내부적 요건과 외부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사회주의 경제의 내재적 비효율성과 폐쇄성에서 기인한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김정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상 과제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의 체제는 오래 갈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개방 내지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다. 대외개방과 체제개혁은 북한사회에 제한된 의미의 자율공간을 보다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일부 경제영역은 국가의 직접통제 외곽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북한사회 내에 시민사회를 형성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김정일체제의 등장은 혁명 1세대가 물러가고 2세대가 북한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세대교체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고난과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혁명 1세대에 비해 성공한 혁명의 결과에 안주하며 성장한 혁명 2세대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신축적이며 개방적인 성향을 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현재 북한 인구의 78.5%에 달한다. 이들은 대체로 무조건적인 동의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자유로운 의식을 강조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혁명 2세대의 부상과 전후세대의 등장도 북한 시민사회의 장래를 — 장기적으로는 — 낙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탈냉전의 국제정세가 북한에게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조만간 냉전이 서서히 해소되어 갈 것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기존의 대남, 대미 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1991년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합의서 채택, 조일 및 조미 수교의 노력 등은 북한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냉전구조가 바뀌어 가면 북한이 과거처럼 그들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가 영역 밖에 현재보다 자유로운 시민적 활동공간이 열릴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북한사회내에 시민사회적 요소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어떤 것일까? 첫째,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북한사회 안에 자율적 의식과 합리적 태도를 자극하고 나아가서 다원적 가치들을 전파할 수 있는 채널과 접촉범위를 넓혀줄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남한의 기업과 관련분야에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협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남북한 사회에 공히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제를 정치에 경직되게 묶어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협력을 중단하는 이른바

정경 연계정책에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정치를 앞세우는 판에 우리 측만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북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면 대국적 견지에서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데 너무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일과, UN기구를 통한 경제, 기술 협력사업 및 APEC 등 지역협력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대승적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다방면에 걸친 인적 교류도 북한사회의 시민사회 배양에 기여할 것이다. 정치인, 학자, 언론인, 종교인, 체육인, 문화예술인 등의 대북한 교류와 접촉이 빈번해질수록 북한의 주민과 지식인들에게 시민사회적 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도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건전한 시민사회의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북접촉의 승인 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그 창구도 가능한 한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셋째, 북한 시민사회의 취약성은 그들의 폐쇄된 언론 때문에 초래되는 정보의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 남북한간 신문, 방송의 개방과 출판물의 교류도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야에 대한 서방세계와 북한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시민사회의 성장이 아직도 불투명해 보이는 주된 이유는 그 주민들이 외부와 절연되어 통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당과 국가에 의해 여과된 정보만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세계와 통신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북한에 시민사회의 토대가 형성되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끝으로 우리는 북한체제가 스스로 개방과 개혁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내정을 민주화하여 장차 예상되는 정치통합의 길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당면하고 있는데 경제적 위기나 심각한 궁핍속에서 시민사회가 꽃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만약 시민적 토대가 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가 대중적 정치불만으로 정치화되거나 항거운동으로 폭발되는 경우 통일의 전도가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하에서 정부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에 건설한 시민사회의 토대를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통일의 과정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통일후에 초래될 후유증과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대북관계에서 인도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밀고 나가되 포용력있고 신축성 있는 자세와 정책에 의거하여 그들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도와주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